

금융투자업규정

<목 차>

1. 파생결합증권 중도환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
2.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·건전성 규제 신설 및 신용위험관리 강화
3.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의무 부과
4.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요건 강화 등
5.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 기준

금융위원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								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최성규								
	담당부서 (과)	자본시장과		직급	행정사무관								
	국장	김태현		연락처	2100-2655								
	과장	박민우		이메일	skchoi12@korea.kr								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금융투자업규정 제2-24조 제1항								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- 피규제집단 : 증권사 중 현재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22개사 - 이해관계자 : 증권사 중 현재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22개사, 금융투자협회												
5. 규제존속기한	없음(지속추진 필요)												
6. 구분 (신설 또는 강화)	강화								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자 요청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시 적용하는 중도상환 가격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주기적 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투자매매·중개업자의 내부 통제기준에 반영								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<table><tr><td>법적 근거</td><td>법 규 명</td><td>소관부서</td></tr><tr><td>법률</td><td>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</td><td rowspan="2">금융위원회</td></tr><tr><td>시행령</td><td>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</td></tr></table>					법적 근거	법 규 명	소관부서	법률	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	금융위원회	시행령	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
	법적 근거	법 규 명	소관부서										
	법률	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	금융위원회										
시행령	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								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투자자 요청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시 적용하는 중도상환 가격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도록 하는 내용을 투자매매·중개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2-24조(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)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(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제2-24조(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생략)
<신설>	5. <u>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중도 환매시 적용하는 중도 환매 가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 산정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관련한 사항</u>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☐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 에서 일정비율을 차감*한 금액을 수령

* 중도상환시 증권사가 헤지를 위해 보유한 기초자산·파생상품 등을 청산(unwinding) 하기 위한 비용 등이 발생되므로 공정가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하여 지급

- 동일상품이라도 헤지거래의 상황, 시장상황, 백투백(back-to-back) 회사에서 받은 금액, 중도상환 요청규모 등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다름

- ☐ 현재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 가격의 공정성을 강제하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음

* 파생결합증권의 중도상환은 의무사항이 아닌 투자자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임

- 증권사가 투자자를 차별해서 고액·기관투자자에게 높은 중도상환가격 비율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☐ 현재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격의 공정성을 강제하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,

- 일관된 기준 없이 증권사가 임의로 중도상환가격을 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중도상환가격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☐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 시 투자자간 차별 소지가 없도록 하고 실무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, 중도상환가격의 투명성 제고

2. 대안의 발굴·검토

가. 고려된 대안

< 현행유지안 : 파생결합증권의 중도상환에 대한 별도 규율 없음 >

- ☐ 현행과 같이 파생결합증권의 중도상환에 대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지 않음

< 비규제대안 : 해당 없음 >

- ☐ 현행과 같이 파생결합증권의 중도상환에 대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지 않음

< 규제대안1 :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>

- ☐ 투자자 요청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시 적용하는 중도상환 가격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
 -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투자매매·중개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

< 규제대안2 : 중도상환가격 비율 차별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지정 >

- ☐ 투자자간 중도상환가격 비율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중 하나로 정하여 직접적인 제재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

나. 대안의 분석

<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>

- ☐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상이 아님

<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 >

- ☐ 동 규제는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,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

< 해외사례 분석 >

- ☐ 홍콩의 경우 최소 2주마다 비상장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위한 매수호가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가 동 호가에 매도하는 의사 표명시 당일에 재매입하여야 함

※ 국가·상품마다 차이가 있음

< 타법사례 분석 >

- ☐ 해당사항 없음

< 위임근거 검토 >

- ☐ 근거법령 :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,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

< 이해관계자 협의 >

- ☐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, 특히 사항은 없었음

<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>

- ☐ 현재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 가격의 공정성을 강제하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,
 - 현행처럼 별도의 규제가 없게 되면, 일관된 기준 없이 증권사가 임의로 중도상환가격을 정할 여지가 있음

< 결론 >

- ☐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시 투자자간 차별 소지가 없고, 실무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동 규정 개정 필요

3. 대안별 비용·편익 분석

- ☐ 금융투자회사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음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

가.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

< 행정적·재정적 집행 가능성 >

- ☐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 업무는 이미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

< 기술적 집행 가능성 >

- ☐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 업무는 이미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, 이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

<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>

☐ 해당사항 없음

나.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

<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>

☐ 해당사항 없음

< 경쟁영향평가 >

☐ 해당사항 없음

< 기술규제 영향평가 >

☐ 해당사항 없음

다. 대안 선택 및 근거

☐ 증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투자자 요청에 의한 파생결합 증권 중도상환시 적용하는 중도상환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,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함

○ 현행 유지안 및 비규제안은 일관된 기준 없이 증권사가 임의로 중도상환가격을 정할 여지가 있어 선택할 수 없음

○ 투자자간 중도상환가격 비율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하는 규제대안2는

- 중도상환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증권사의 시혜적(施惠的) 조치에 불과하므로, 이를 이유로 제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음

⇒ 규제대안1이 규제 합목적성 및 최소침해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됨

라.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

- ☐ 증권사가 중도상환가격을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투자자간 차별 소지를 제거할 필요
- 그 기준은 증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마련하도록 하여 증권사 영업의 자율성 보장

마.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

- ☐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, 특이 사항은 없었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· 건전성 규제 신설 및 신용위험관리 강화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송병관
	담당부서 (과)	자본시장과		직급	행정사무관
	국장	김태현		연락처	02-2100-2643
	과장	박민우		이메일	songbk99@korea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금융투자업 규정 제3-24조의4제2항, 제3-45조의3, 제3-66조제1항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금융투자업자	종합금융투자 사업자(6개)	입법예고	-
	이해관계자	금융투자업자, 관련협회	종합금융투자 사업자(6개). 금융투자협회	입법예고	-
5. 규제 존속기한	없음(지속추진 필요)				
6. 구분 (신설 또는 강화)	신설 및 강화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원화유동성비율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고,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일부 상향하며, 신용위험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영업보고서 항목을 일부 추가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자본시장법 77조의3 동법 시행령 77조의6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원화유동성비율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고,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일부 상향하며, 신용위험 관련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영업보고서 항목을 일부 추가함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-24조의4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) ① (생 략)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잔존만기가 1개월 및 3개월 이내인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해 각각의 기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원화유동성자산 비율(이하 “원화유동성비율”이라 한다)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때 제3-8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. 1. “정상” 분류 자산의 100분의 0.85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2. “요주의” 분류 자산의 100분의 7 3. “고정”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4. “회수의문” 분류 자산의 100분

현 행	개 정 안
<p data-bbox="196 414 363 454"><신 설></p> <p data-bbox="161 1760 791 2067">제3-66조(영업보고서등의 제출) ① 영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7. (생 략)</p>	<p data-bbox="866 224 962 264">의 50</p> <p data-bbox="837 288 1437 398">5. “추정손실”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</p> <p data-bbox="804 414 1437 1727">제3-45조의3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위험 관리)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(신용공여, 채무보증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·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 후 신용위험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,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 data-bbox="804 1760 1437 2067">제3-66조(영업보고서등의 제출) ① ----- ----- ----- 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8. (생 략)</p>	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예탁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예탁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

1. 규제 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☐ 국내 증권사가 적극적인 위험인수가 필요한 기업금융 업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,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사(종합금융투자사업자)에게 새로운 업무를 허용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☐ 새로운 업무양태가 출현함에 따라,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, 건전성 규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, 조달·운용간의 만기 미스매치를 관리·감독하기 위하여 원화유동성 지표 도입
- ②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유사하게 상향 조정하는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
- ③ 신용위험 유발거래위험을 적절히 평가·관리할 수 있도록,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
- ④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의 예탁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업무보고서 기재사항에 포함

2. 대안의 발굴·검토

가. 고려된 대안

< 현행유지안 :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지표를 현행유지 >

- ☐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투자매매업자와 동일한 건전성(NCR, 순자본비율) 규제를 적용 받음

< 비규제대안 : 해당사항 없음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건전성 규제가 필요함

< 규제대안 :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지표 개선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원화유동성 지표 도입,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, 내부통제체계 구축·운영 등을 도입

나. 대안의 분석

<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상이 아님

<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

< 해외사례 분석 >

- ☐ 해당 사항 없음

< 타법사례 분석 >

☐ 해당 사항 없음

< 위임근거 검토 >

☐ 근거법령 : 자본시장법 77조의3, 동법 시행령 77조의6

< 이해관계자 협의 >

☐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, 특히 사항은 없었음

<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>

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기존 NCR 규제로는 신규업무 수행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성, 건전성 및 신용 관련위험을 적시에 포착하거나 제대로 통제하기 곤란

< 결론 >

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, 건전성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

3. 대안별 비용·편익 분석

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존 시스템으로 신규업무 영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

가.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

< 행정적·재정적 집행 가능성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유동성·건전성 규제는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

< 기술적 집행 가능성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유동성·건전성 규제는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기술적 어려움 없음

<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>

- ☐ 해당사항 없음

나.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

<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>

- ☐ 해당사항 없음

< 경쟁영향평가 >

- ☐ 해당사항 없음

< 기술규제 영향평가 >

- ☐ 해당사항 없음

다. 대안 선택 및 근거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새로운 업무양태가 출현함에 따라,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, 건전성 규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라.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특성에 맞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유동성·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흐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

마.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

- ☐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, 특이 사항은 없었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의무 부과								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최성규								
	담당부서 (과)	자본시장과		직급	행정사무관								
	국장	김태현		연락처	2100-2655								
	과장	박민우		이메일	skchoi12@korea.kr								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금융투자업규정 제4-20조제1항, 제4-93조제33호								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- 피규제집단 : 파생결합증권 등을 판매하는 금융회사(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) - 이해관계자 : 파생결합증권 등을 판매하는 금융회사, 금융투자협회												
5. 규제존속기한	없음(지속추진 필요)												
6. 구분 (신설 또는 강화)	신설								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에 대해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설명의무 이행 등 상품판매 쏠 과정을 녹취·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								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<table><tr><td>법적 근거</td><td>법 규 명</td><td>소관부서</td></tr><tr><td>법률</td><td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, 제108조</td><td rowspan="2">금융위원회</td></tr><tr><td>시행령</td><td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, 제109조</td></tr></table>					법적 근거	법 규 명	소관부서	법률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, 제108조	금융위원회	시행령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, 제109조
법적 근거	법 규 명	소관부서											
법률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, 제108조	금융위원회											
시행령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, 제109조								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등 상품판매 전 과정을 녹취·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
 - (적용상품) 파생결합증권(ELS·ELB·DLS·DLB),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ELF)의 집합투자증권, 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신탁계약(ELT)
 - (녹취대상 투자자 범위) ①투자자성향 파악결과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투자자, ②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1. ~ 14. (생략)	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4. (생략) 15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에게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(해당 투자자에 대해 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은 제외한다)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가 기록된 전자기록</u>

현행	개정안
<p>제4-93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1. ~ 33. (생략) <신설></p>	<p><u>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행위</u> 가. <u>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투자성향을 파악한 결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부적합·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투자자</u> 나. <u>70세 이상인 투자자</u></p> <p>제4-93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2. (현행과 같음) 33. <u>제4-20조제1항제15호 각 목에 따른 투자자와 신탁재산을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제3호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(해당 투자자에 대해 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은 제외한다)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가 기록된 전자기록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행위</u></p>

1. 규제 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최근 지속된 저금리 기조하에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변동성이 높은 해외지수 기초상품을 중심으로 발행잔액*이 크게 증가

* ELS·DLS 발행잔액(조원) : ('10년말) 22.3 → ('16.10말) 101.2

해외지수별 발행잔액('16.8월말, 조원) : HSCEI 34.0, Eurostoxx 43.5

- 특히, 은행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고령자*·안전성향 투자자**에 판매되고 있어 적합성·적정성 원칙 훼손 우려 증가

* 개인투자자 중 50대 이상 투자자 비중이 약 57%이며, 70대 이상 투자자의 1인당 투자금액이 약 1.1억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음

** 부적합확인서 징구비율('13.1~'15.6월 판매분) : 은행 52.4%, 증권 9.3%

- 고령 투자자 등 다수의 안전성향 투자자들이 높은 투자 위험을 갖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거액(예 : 노후대비자금 등)을 투자하고 있어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 증대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현재 법 제47조에 의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사후적으로 서면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설명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곤란하여 설명의무 내실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필요

- 또한, 녹취가 기록된 전자기록물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상품판매 전 과정을 녹취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이 설명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판매환경을 조성

- 판매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당 권유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 최소화
- 투자자의 권리행사 확대

2. 대안의 발굴·검토

가. 고려된 대안

< 현행유지안 : 투자자 서명 등을 통해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 확인 >

- ☐ 현행과 같이 금융투자상품 권유시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음

< 비규제대안 : 해당사항 없음 >

- ☐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장치 필요

< 규제대안 :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상품판매 과정 녹취 >

- ☐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설명의무 이행 등 판매全过程를 녹취·보관하고 고객 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

나. 대안의 분석

<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>

- ☐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상이 아님

<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 >

- ☐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의 의무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

< 해외사례 분석 >

- ☐ 홍콩금융관리국(HKMA)의 경우 구조화 증권 등의 판매에 대해서 녹취를 의무화

< 타법사례 분석 >

- ☐ 해당 사항 없음

< 위임근거 검토 >

- 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제108조, 동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및 제109조제3항

< 이해관계자 협의 >

- ☐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, 특히 사항은 없었음

<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>

- ☐ 현재 투자자 서명 등을 통해 설명의무 이행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, 서명만으로는 고위험 투자상품의 여러 가지 위험요인 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데 한계

< 결론 >

- ☐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설명의무 이행 등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 개정 필요

3. 대안별장 비용·편익 분석

-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·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의 연간균등순비용이 10억원 미만인
될 것으로 판단됨

현행	개정안
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1. ~ 14. (생략)	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에게 영 제52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(해당 투자자에 대해 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은 제외한다)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가 기록된 전자기록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행위 가. 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투자성향을 파악한 결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부적합·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투자자 나. 70세 이상인 투자자
제4-93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”란 다음	제4-93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----- -----

<p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1. ~ 33.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3. 제4-20조제1항제15호 각 목에 따른 투자자와 신탁재산을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(해당 투자자에 대해 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은 제외한다)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가 기록된 전자기록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행위</p>
---	---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

가.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

< 행정적·재정적 집행 가능성 >

☐ 기존에도 금융회사의 전화를 통한 판매과정에 녹취 방법이 활용되고 있었으며, 특정 상품 및 투자자에 대한 판매과정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행정적·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

○ 녹취장비 등을 구축·유지하는데 비용이 수반되나 투자자 보호 등 규제에 따른 편익*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

* 파생결합증권 및 이와 관련된 상품(ELT 등)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고령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제기되는 상황

< 기술적 집행 가능성 >

☐ 규제대안 집행을 위해 필요한 녹취 장비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장치가 아니므로 기술적 집행에 문제 없음

<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>

☐ 해당사항 없음

나.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

<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>

☐ 해당사항 없음

< 경쟁영향평가 >

☐ 해당사항 없음

< 기술규제 영향평가 >

☐ 해당사항 없음

다. 대안 선택 및 근거

☐ 부적합 투자자 및 고령투자자에 대하여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을 녹취하도록 하는 규제대안이 바람직

○ 현행 유지안은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의무 등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파악하는데 한계

○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 및 고령투자자에 대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필요

⇒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유지안 보다 유리

라.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

☐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시 상품구조 및 위험 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불완전판매 가능성 최소화

마.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

☐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, 특히 사항은 없었음

< 규제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요건 강화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송병관
	담당부서 (과)	자본시장과		직급	행정 사무관
	국장	김태현		연락처	02-2100-2643
	과장	박민우		이 메 일	songbk99@korea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금융투자업규정 제4-102조의2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금융투자업자	종합금융투자 사업자(6개)	입법예고	-
	이해관계	금융투자업자. 관련협회	종합금융투자 사업자(6개), 금융투자협회	입법예고	-
5. 규제 존속기한	없음(지속추진 필요)				
6. 구분 (신설 또는 강화)	강화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시행령(제77조의6)에서 금융투자업규정에 위임한 사항으로,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차등화된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 신설에 해당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자본시장법 제77조의3 동법 시행령 제77조의6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산정시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에서
신종자본증권은 제외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-102조의2(자기자본의 범위) 법 제77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자본 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 대조표상의 <u>자기자본에 지정신청 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 하여 계산한다.</u>	제4-102조의2(자기자본의 범위) --- ----- <u>자기자 본(제3-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 건부자본증권으로 조달한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</u> -- ----- <u>자본금 및 자 본잉여금의 증감액</u> -----.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☐ 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('16.8.2일) 발표 이후 여러 증권사들이 내부적으로 자본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
- 증권사들은 자사주 매각, 이익유보 등과 함께 회계처리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검토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☐ 과감한 위험인수가 수반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특성상 부채성 자본은 업무 수행에 적절한 자본으로 보기 어려움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산정시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제외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손실 감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의 기능을 강화

2. 대안의 발굴·검토

가. 고려된 대안

< 현행유지안 :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활용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시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함

< 비규제대안 : 해당사항 없음 >

- ☐ 원활한 기업금융업무 영위를 위하여 자기자본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

< 규제대안 : 자기자본 산정시 신종자본증권 제외 >

- ☐ 신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
요건인 자기자본 산정시 제외

나. 대안의 분석

<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시 자기자본에서 신종자본증권
발행규모를 제외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에 해당

<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간의
자율성·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

< 해외사례 분석 >

- ☐ 타권역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은 '자기자본'이 아닌, '자본금'
으로 동등 비교는 곤란함

< 타법사례 분석 >

- ☐ 해당 사항 없음

< 위임근거 검토 >

- ☐ 근거 법령 : 자본시장법 제77조의2제6항

< 이해관계자 협의 >

- ☐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, 특히 사항은
없었음

<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>

- ☐ 자기자본 수준별로 신규업무를 허용한 것은 충분한 손실감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부채성 자본은 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음

< 결론 >

- ☐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공급하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정책의 취지상 신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산정시 제외함

3. 대안별 비용·편익 분석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한 업무로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

가.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

< 행정적·재정적 집행 가능성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시 자기자본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규모를 제외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

< 기술적 집행 가능성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시 자기자본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규모를 제외하는 사항으로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기술적 어려움 없음

<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>

☐ 해당사항 없음

나.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

<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>

☐ 해당사항 없음

< 경쟁영향평가 >

☐ 해당사항 없음

< 기술규제 영향평가 >

☐ 해당사항 없음

다. 대안 선택 및 근거

☐ 과감한 위험인수가 수반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특성상 부채성 자본은 업무 수행에 적절한 자본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대응마련이 필요함

라.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

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조건인 자기자본산정에서 신종 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제외함으로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분한 손실감내능력의 확보가 가능

마.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

☐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, 특이 사항은 없었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 기준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송병관
	담당부서 (과)	자본시장과		직급	행정사무관
	국장	김태현		연락처	02-2100-2643
	과장	박민우		이메일	songbk99@korea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3 및 제77조의6제1항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금융투자업자	종합금융투자 사업자(6개)	입법예고	-
	이해관계자	금융투자업자, 관련협회	종합금융투자 사업자(6개), 금융투자협회	입법예고	-
5. 규제존속기한	없음(지속추진 필요)				
6. 구분 (신설 또는 강화)	강화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단기금융 업무,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허용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자본시장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업무*를 허용

* 내부주문집행(3조원), 단기금융업무(4조원), 종합투자계좌(8조원)

※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3 및 제77조의6제1항의 세부위임사항으로,
동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와 내용상 동일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-102조의5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) 영 제77조의6제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”이란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.	제4-102조의5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) ①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외 본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”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말한다. ②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 1.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 2.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인 경우 매매금액 및 매매수량에 제한이 없는 것 ③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 전단

현 행	개 정 안
	<p>및 동조 제3항제3호 전단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금융 관련 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 2.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3.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영 제6조제4항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나.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다.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(제4-6조제5항제2호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) 라. 영 제6조에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 마.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

현 행	개 정 안
	<p>5. <u>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주권</u></p> <p>6. <u>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, 투자적격 등급 중 최하위 등급 또는 차하위등급을 받은 회사채</u></p> <p>7. <u>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</u></p> <p>④ 영 제77조의6제2항제2호에서 “<u>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</u>”이란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<u>예탁받은 예탁금과 이를 운용함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.</u></p> <p>⑤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<u>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</u></p> <p>1. <u>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예탁을 개시한 지 6개월 이내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</u></p> <p>2. <u>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예탁을 개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<u>시 한 지 6개월 후부터 12개월</u> <u>이내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</u> <u>이 100분의 30이상일 것</u></p> <p>3. <u>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예탁을 개</u> <u>시 한 지 12개월 후부터 18개월</u> <u>이내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</u> <u>이 100분의 40이상일 것</u></p> <p>4. <u>예탁자의 예탁금 인출로 인해</u> <u>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영</u> <u>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비율을</u> <u>충족하지 못한 경우: 영 제77조</u> <u>의6제2항제3호의 비율을 충족할</u> <u>때까지 제3항 각 호 외의 자산을</u> <u>취득하지 않을 것</u></p> <p>⑥ <u>영 제77조의6제2항제5호 본문</u> <u>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</u> <u>는 부동산 관련 자산”이란 다음 각</u> <u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</u> <u>말한다.</u></p> <p>1. <u>부동산개발회사 및 부동산투자</u> <u>목적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</u></p> <p>2. <u>부동산개발회사 및 부동산투자</u> <u>목적회사 등에 대한 대출채권</u></p> <p>3. <u>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</u> <u>목적으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</u> <u>수익증권 및 이와 유사한 기구에</u> <u>출자한 출자지분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된 자산</p> <p>⑦ 영 제77조의6제3항제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종합투자계좌로 수탁한 자금을 「신탁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을 통해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분별 관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</p> <p>⑧ 영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합투자계좌 예탁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거래일 것 2. 영 제77조의6제3항제5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할 것 3. 거래 전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고,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·유지할 것 4.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예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현 행	개 정 안
	<p>⑨ 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에 따라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합투자계좌로 예탁을 개시한 지 6개월 이내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. 종합투자계좌로 예탁을 개시한 지 6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 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일 것 3. 종합투자계좌로 예탁을 개시한 지 12개월 후부터 18개월 이내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60이상일 것 4. 예탁자의 예탁금 인출로 인해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: 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의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제3항 각 호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을 것 <p>⑩ 영 제77조의6제3항제5호 본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영 제260조제1항(제1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호는 제외한다)에서 정한 방법을 말한다.</p> <p>⑪ 영 제77조의6제3항제5호 본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”이란 영 제260조제2항(제5호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영 제260조제2항을 준용할 때 “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”는 “준법감시인”으로 “집합투자재산”은 “종합투자계좌재산”으로 본다.</p> <p>⑫ 영 제77조의6제3항제5호 단서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예탁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로서 반환을 요청하는 예탁자에게 원금과 사전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경우를 말한다.</p> <p>⑬ 영 제77조의6제3항제6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”란 같은 기업집단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)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.</p> <p>⑭ 영 제77조의6제3항제9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</p> <p>1. <u>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100분의 5에 달할 때까지 종합투자계좌 운용보수의 100분의 25이상을 적립하고,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실적이 투자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것에 미달할 경우 동 적립금을 우선하여 충당할 것</u></p> <p>2. <u>그 밖에 예탁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</u></p>

1. 규제 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☐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('13년)하였으나,
- ☐ 국내 증권사는 여전히 위탁매매와 같은 중개업 위주로 업무를 영위하고 있어 기업금융 업무의 경쟁력이 크게 뒤쳐진 상황임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☐ 현행 제도적 틀 안에서, 종합투자사업자 간 자율적 경쟁을 통한 업무 혁신(innovation)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
 - 국내 증권사가 기업금융 업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,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사(종합금융투자사업자)에게 새로운 업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☐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신규로 허용
 - 이를 통해 M&A 등 기업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

2. 대안의 발굴·검토

가. 고려된 대안

< 현행유지안 : 현행 업무 수준을 유지 >

- ☐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현행 고유업무(기업신용공여, 전담신용공여 등)를 허용

< 비규제대안 : 해당사항 없음 >

☐ 신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함

< 규제대안 :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에 따른 차등업무 허용 >

☐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신규업무(단기금융업무, 종합 투자계좌 관리업무)를 허용

나. 대안의 분석

<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>

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상이 아님

<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 >

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

< 해외사례 분석 >

① 중수익 시현·수익구조 다변화 진전

- 과거 高위험-高수익 사업으로 높은 자기자본이익률을 기록하던 글로벌 IB들은 금융위기 후 규제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는 사업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5~10% 수준의 中수익을 시현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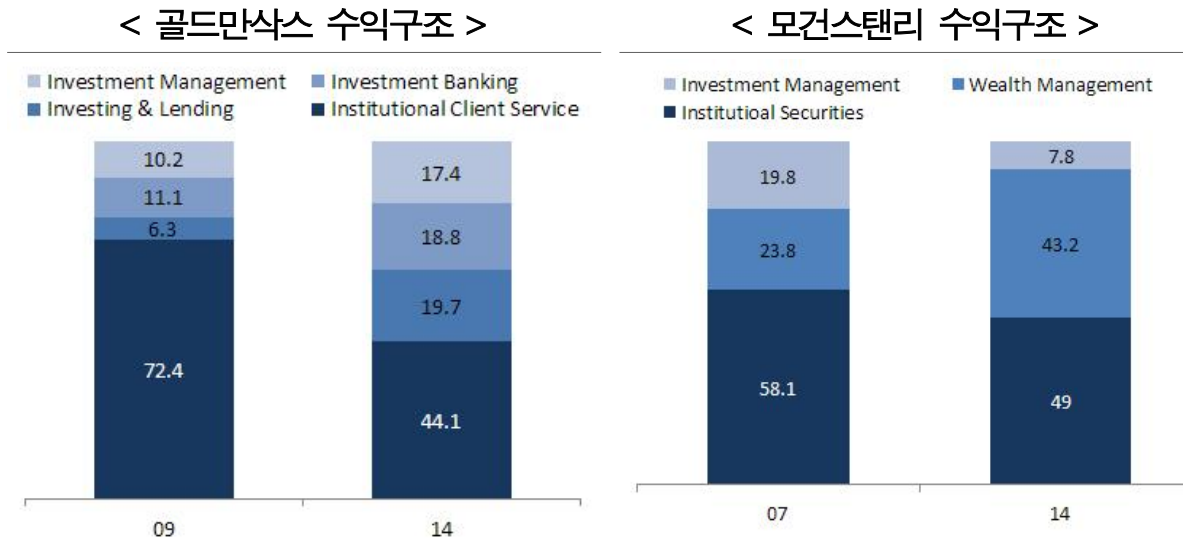
< 주요 IB들의 금융위기 전후 자기자본이익률(ROE) >

(단위 : %)

	골드만삭스	모건스탠리	UBS	도이치뱅크	노무라
2005년	21.8	17.3	39.4	12.5	15.5
2014년	9.7	4.4	6.6	2.5	8.2

주 : 도이치뱅크의 경우 각종 과징금, 소송비용 등으로 '14년 이익률 저조

- 위기 후 고위험업무의 자기자본 규제 강화, 수익성 제고 니즈 등으로 IB들이 자산관리 등 사업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투자은행 업무에 집중됐던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진전



주 : '07 및 '09년은 순영업수익, '14년은 영업수익 기준

② 안정적 수익기반 강화

- 주요 IB들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 수익원 확보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, 특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자산관리·자산운용사업 확대에 주력
- 모건스탠리, UBS는 금융위기후 전환한 자산관리형 모델을 지속 강화하고, 대표 IB 골드만삭스도 소매은행업과 자산운용업 확대를 추진 중이며, 맥쿼리는 수익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구조 전반을 개편

③ 미래 성장동력 확보 노력

- 핀테크 등 디지털화, 고령화와 같은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신규 사업기회를 모색, 이에 적극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 확대

- IT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IB들은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블록체인 등 신규 수익원 발굴·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, 다이와는 일본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해 상속·사업승계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

④ 사업모델 자체에 대한 재점검

- 단순한 사업영역의 축소·확대를 넘어서 기존 사업모델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, 각 사의 역량에 맞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모델로의 근본적 전환을 시도
- 골드만삭스는 IT스타트업 투자를 넘어 사업영역, 업무방식, 문화 등 전반에 걸쳐 IT에 기반한 사업모델 혁신을 모색 중
- '10년 Post Bank를 인수하며 유니버설뱅크 banking 전략을 추구했던 도이치뱅크는 동 사 매각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선회
- 맥쿼리는 인수주선, M&A자문 등 전통적 IB사업을 축소하고 자산운용, 리스, 대출 등 강점을 보유하고 안정적 수익창출에 초점을 둔 사업구조(annuity-style business)로의 재편을 추진

⑤ 해외사업의 선별적 확대

- 그간 전방위적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던 글로벌 IB들이 최근 수익성 강화에 주력하면서 선별적 해외진출 전략으로 선회
- 모건스탠리, 도이치뱅크, 맥쿼리는 해외사업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저수익 지역에서 과감히 철수하며 해외사업의 수익성 제고에 나섰으며, UBS · 노무라 · 다이와는 잠재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사업 전개

⑥ 日·中 IB의 해외 M&A를 통한 성장모색

- 일본·중국내 1~2위 증권사인 노무라, 중신, 해통증권은 해외 IB

인수를 통해 로컬증권사에서 글로벌 IB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

-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아태·유럽·중동 법인을 인수한 노무라는 이후 5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데 이어, 이를 기반으로 미국·유럽 IB시장을 적극 공략 중
- 중국내 1위 중신증권과 2위 해통증권은 각각 '13년 CLSA, '14년 BESI(포르투갈 최대IB) 인수를 통해 글로벌 IB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, 폭넓은 해외 거점을 확보

< 타법사례 분석 >

- ☐ 해당 사항 없음

< 위임근거 검토 >

- ☐ 근거법령 :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제3항

< 이해관계자 협의 >

- ☐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, 특히 사항은 없었음

<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브로커리지 및 신용공여 업무에 기반한 단순·안정적 업무에 안주하고 있어 실물경제 자금지원기능이 저하
-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등 신규 업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본규모가 영세하여 안정적 모험자본 공급을 기대하기 곤란

< 결론 >

- ☐ 증권사가 적극적인 위험인수가 필요한 기업금융 업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수준별 신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자본확충 등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

3. 대안별 비용·편익 분석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존 시스템으로 신규업무 영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

가.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

< 행정적·재정적 집행 가능성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규모에 따라 영위하게 될 신규업무는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

< 기술적 집행 가능성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규모에 따라 영위하게 될 신규업무는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기술적 어려움 없음

<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>

- ☐ 해당사항 없음

나.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

<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>

- 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관리 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자산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,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 되면 중소·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·융자 규모도 현행 대비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

< 경쟁영향평가 >

- ☐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하에서는 경쟁을 통한 자기 혁신(innovation)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
- 이번에 신규로 허용되는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관리 업무의 경우 은행법 적용이 명시적으로 배제(자본시장법 §77 의3⑧)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며* 일반 증권사는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동 신규업무 영위가 불가능
- * 투자은행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적 하에 자본시장법 개정('13.5월)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가 도입될 당시 도입된 규정
- 일반 증권사의 업무영위 불가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이는 금번 개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

< 기술규제 영향평가 >

- ☐ 해당사항 없음

다. 대안 선택 및 근거

- ☐ 현재 우리 증권산업은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공급하기에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고, 기업금융 등 高부가가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라.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

- ☐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

마.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

- ☐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, 특이 사항은 없었음